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유일 신규 지정... "탄소중립 선도"



1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실무진으로 구성된 '원팀' 2 특구 사업 설명 이미지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올해 전국 9개 자치단체가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으나, 부산 특구만 선정된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의 실무진 5명으로 일명 '원팀'을 출범해 부산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면서 관련 기업과 기관을 연계하는 역량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부산시 미래기술혁신과 오유진 R&D혁신팀장과 김보경 주무관, 부산테크노파크 안재성 산업기획팀 팀장과 안성관 과장, 윤원근 클린테크기술단·에너지융복합센터 센터장.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쓰는 선박 개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제안하기로 하고 뚝뚝 뚫었다.

이런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려면 액체 암모니아 운반과 선박에 암모니아를 주입하는 병커링,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로 쓰는 선박의 건조 및 운항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팀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17개 기업과 기관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또 부산 특구 사업이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의 현실과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썼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부산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51%를

차지하고, 전국 대기오염 물질의 10%에 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의 63%가량인 344개가 부산에 몰려 있고, 관련 조항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동남권에 위치해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산이 최적의 입지라는 논리를 폈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은 사업계획을 총괄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담당한 부산시는 물론, 수요조사와 경쟁력 있는 컨소시엄 구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부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부산 강서구, 영도구와 부산 앞바다 등 21.76km²이며, 파나시아 등 17개 기업과 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체 사업비는 내년부터 2년간 380억 원 규모로 투입된다. 국비 232억 3천만 원, 시비 93억 4천만 원, 민간자본 54억 7천만 원이 각각 들어간다.

부산시는 관련 산업 발전으로 매출 5천700억 원과 고용 유발 2천 6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❶

열려라 가덕, 날아라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산·경남·울산을 재도약 시킬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



장애물 없는 '안전한 공항' | 소음피해 없는 '24시간 운영 공항'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공항' | 확장성이 있고 항만이 연계되는 '경제적 공항'

부산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화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재) 부산테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으로 부산지역 특구 관련 실무를 총괄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업무를 담당함. ▶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 규제자유특구 관련 각종 협의체 운영 ▶ 지정된 특구 운영 및 성과 관리

수요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신규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을 위해 미래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업, 관련규제, 추진기업(기관) 등 발굴
- 대상사업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20개 신기술 및 47개 신산업분야 등)
- 제안자격 : 신기술, 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내 기업 및 기관
- 조사기간 : 2020. 12. 22(화)부터 상시접수
- 조사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물 통한 온라인 접수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2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산업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신규 특구 사업을 접수하고 있음. 규제자유특구 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관련 규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문의처 : (재)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051-865-6981, www.btp.or.kr 사업공고·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공고 참조)

